



주간통일정세 2011-11(2011.03.07~03.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1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김정일·정은, 북러 합동공연 관람(3/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3.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여성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여성의 혁명적 기개를 높이 떨치며 조국청사에 빛날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 있는 우리의 전체 여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다”고 전함.
- 김정은을 비롯해 최영림 내각 총리와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비서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락희 내각 부총리도 수행단에 포함

#### ● 김정은 호명 서열서도 2인자 굳히기 ‘속도전’(3/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정은과 전날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했는데 중앙통신은 수행단 명단을 전하며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영림 내각 총리보다 앞세움.
- 지난해 9월 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이후 김 위원장의 수행단 호명 순서는 김영남과 최영림,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순이었으며, 지난달 3일 설명절 음악회 관람 보도까지 이 순서는 그대로 유지됨.

#### ● 北언론매체 기사량 급증…‘긴급기사’도 등장(3/9,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분석해본 결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20.1건, 12월 17.8건의 국문기사를 송고했으나 올해 들어 1월에 매일 25.4건, 2월엔 36.6건, 3월에는 8일 현재까지 하루 평균 58.3건을 다루며 기사량을 눈에 띄게 늘리고 외국 소식 보도를 부쩍 강화
- 영문 기사 건수도 급증하여 작년 11월엔 하루 평균 19.1건, 12월에



는 16.29건을 처리했던 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1, 2월에 각각 하루 평균 20.3건, 28.5건의 기사를 송고했으며 3월 들어서는 7일까지 하루 52건을 쏟아냄.

- 남측을 비방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기사가 잦아지면서 동시에 북한의 우방 관련 보도도 부쩍 강화되었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소식을 ‘평양 ○월○일발’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평양 대신 베이징발, 모스크바발로 명기

● **김정은, 중동사태 불통 경계강화 지시(3/10, 요미우리)**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2월 하순 중동의 민주화 시위 도미노와 관련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경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
- 김정은은 또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적대세력이 공화국(북한)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고 (북한내) 일부에서는 사상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런 발언은 2월 하순 조선노동당과 군 간부들에게 구두로 전달됐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일부나라 색깔혁명에도 우린 끄떡없다”(3/10, 평양방송)**

-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매체인 평양방송은 10일 “우리의 사상문화 전선은 그 어떤 반동적인 사상문화 공세와 자유화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강조
- 방송은 “일부 나라에서 색깔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고 제국주의자들이 불어대는 기만적인 자유, 민주주의 나팔에 춤을 춘 것과 관련된다”고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역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사상문화전선을 끊임없이 강화해온 자랑스런 역사”라고 주장

● **김정일, 함흥시 산업시설 현지지도(3/10,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흥남제련소, 함흥모방직공장 등 함흥시의 산업시설을 현지지도함.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한 이후 사흘만으로, 이번 현지지도에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수행하지 않음.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기남·홍석형·태종수 당비서, 김경희 당 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안정수 경공업상, 류현식 함남도 인민위원장 등이 수행



● **김영남, 美 AP통신사 사장과 담화(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1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8일 방북한 토머스 켈리 미국 AP통신사 사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
- 중앙통신은 김병호 조선중앙통신 사장과 관계자들도 배석했다고 전했다지만 담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김정일동향**

- 김정일, 3.7 동평양대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즈음 北-러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관람(3.8, 중통·중방)
  - 김정은, 최영림, 리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홍석형, 양형섭,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락희, 로성실(「여맹」위원장) 등 함께 관람
- 김정일, 함흥시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및 「감사」 전달(3.10, 중·평방·중통)
  - 김기남·홍석형(黨비서), 김경희(黨부장), 장성택(국방委 부위원장), 태종수(黨비서), 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동행 및 안정수(경공업상) 등 현지영접

나. 경제

● **北, 외화벌이 위해 탄소배출권 판매 추진(3/8, 가디언)**

-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부족해진 외화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한 뒤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은 청정에너지 사업 등록을 위해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 중 하나인 독일의 '테위파우 노르트(TUV NORD)' 그룹과 작업하는 일과 관련, 독일의 기독교사회당 계열 정치재단인 한스 자이텔 재단에 중개 역할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보도함.
- 지난 1월 북한의 북동쪽에 있는 3개 수력발전소를 방문한 한스 자이텔 재단의 베른하르트 켈리거에 따르면 북한은 우선적으로 7~8메가와트급 3개 수력발전소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北, 백남순 삼남 중앙은행 총재에 기용(3/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전국상업일꾼회의 참석자 명단을 전하면서 '중앙은행 총재 백룡천'으로 호칭함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 사망한 백남순 전 북한 외무상의 삼남(三男)인 백룡천이 우리의 한국은행격인 조선중앙은행 총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통신이 7일 전국상업일꾼회의에서 량의경을 '국가가격제정위





- **북한軍 전자·특수전 역량강화 주력(3/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의 연례 각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됐지만 군 구조 개편을 통해 비대칭전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전자정보전과 특수전 능력 배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힘.
  - ISS는 최근 발간한 '2011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1)'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이 전자정보전 능력 향상을 위해 전자정보(ELINT) 수집 장비와 전파교란 장비(jammer), 레이더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보고서는 또 북한의 병력 규모가 인구 2천400만명의 5% 가량인 119만명으로 중국과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최대 5천t의 생화학무기와 핵탄두를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도 갖고 있다고 소개

#### 라. 사회·문화

- **北,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5월 평양서 개최(3/8,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의 제14차 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5월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고 이 행사에 참석하는 네덜란드 회사 'GPI 컨설턴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8일 밝힘.
  - 북한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국제상품전람회를 여는데 북한에서 만든 기계설비와 강철제품, 전자제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각종 상품이 전시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참가해 북한 회사와 투자방안을 논의함.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중앙동물원, 200여 마리의 희귀한 동물들(6종 18마리의 애완용 개, 130여마리의 앵무새 등) 새로 반입(3.8, 중통)

## 2. 대외정세

- **北경제대표단 내달 미국 방문(3/4,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의 경제 관련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내달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함.
  - 이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방미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수전 셔크 소장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대표단은 내달 20일부터 2주일여 동안 미국 서부 샌 디에이고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힘.
  - IGCC는 1993년부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 국방 분야 관리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다자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개최하고 있음.

### ● 北매체 “日 대지진에 전지역 아비규환”(3/1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일본의 대지진 참사 하루 만인 12일 오후 처음으로 “외신들에 의하면 리히터 규모 8.8의 강한 지진이 도호쿠(東北) 지방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휩쓸었고 해일이 들이닥쳐 일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며 외신을 인용해 피해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
- 중앙통신은 “일본 지진관측 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지진과 해일로 이 나라의 전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고 지진 공포증에 휩싸여 있다”며 “최고 높이 10m의 해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의 논밭과 도로가 바닷물에 침수되고 고깃배와 대형 선박들까지 제방을 넘어 해안가로 밀려나왔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틀 전 발생한 중국 윈난(雲南)성 지진 소식을 간단히 전했다나 일본의 대지진 참사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7시께 중앙통신이 처음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보도하지 않음.

#### ■ 기타 (대외)

- 日本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황당한 궤변, 조선재침의 전주곡” 持續 비난 및 영토강탈책동 중단과 對日 적개심 고취(3.8, 중통·민주조선)
- 日本의 올해 美-日 ‘합동군사연습(미사일대처훈련 등)’ 및 ‘최첨단 요격체계’ 완성 결정과 ‘비밀첩보기관 창설’ 등 “일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에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3.9, 중통·노동신문·평방)
- 韓美日 국방장관 회담과 日 ‘자위대’의 ‘韓美 군사훈련’ 참가 계획 등을 거론하며 “韓美日 3각군사동맹 본격화 및 막후조종 세력은 미국”이라고 持續 비난
- 미국과 유럽 등 자본주의 국가의 ‘醫保제도’를 “특권층의 전유물”로 치부하며 미국의 ‘醫保개혁’ 계획 폄하와 세계적인 에이즈 등 新種病 성행을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라고 왜곡(3.10, 중통·노동신문·중방)

### 3. 대남정세

#### ● 北 조국통일연구원, 한미훈련 비난 백서 발표(3/9, 조성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백서를 발표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훈련 성격과 내용, 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장비 등으로 볼 때 철두



- 철미 우리에게 대한 기습적 핵선제타격을 노리고 감행되는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핵무기제거훈련과 평양시가전훈련 등 각종 도발적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난
- 백서는 “올해 합동군사연습은 그 위험성과 도발적 성격에 있어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연습기간은 지난해보다 무려 39일간이나 늘었고 훈련 참가 병력도 올해 최대로 늘었으며 동원된 전쟁장비도 웅근(온전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방대하다”고 주장
  -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한미합동연습의 일지를 제시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이 덤벼든다면 선군의 본때를 단단히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

#### ['귀순 北주민 4명' 관련 보도]

##### ○ 北, 적십자접촉 제한…“전원송환” 되풀이(3/7,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7일 오전 9시30분께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북한 주민의 전원 송환을 해결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며 “박용일 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올 것”이라며 남측에 대해서도 귀순 의사를 밝힌 당사자 4명을 데리고 나올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한적은 이날 정오께 전화통지문을 보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수정 제의하며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7일 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
- 조선적십자회는 오후 6시께 별도의 전통문을 보내 “4명의 귀순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대면을 통해 (귀순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며 전원 송환 요구를 되풀이하며 “오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여기서 쌍방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대면 확인하자”고 주장
- 정부는 앞서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통화를 통해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송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북측은 전원송환을 요구하며 송환절차에 응하지 않음.

##### ○ 北 ‘적십자회담장서 가족 만나야’ 압박

##### (3/8,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이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4명으로 말하면 그들의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귀순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가족, 친척과 동료들은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증하고 있



- 다”는 북한이 7일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로 남측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 내용을 소개하며 남측의 ‘공작 가능성’을 부각시킴.
- 통지문은 “남측의 횡포무도한 비인도주의적 처사는 우리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으며 내외여론은 북남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번 사건처리를 주시하고 있다”며 4명의 귀순을 남측 책임으로 돌림.
  -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괴뢰통일부가 곧잘 외위대던 그 무슨 ‘이산가족’ 문제라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인도주의 간판 밑에 저들의 대결적 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 궤변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누가 인도주의를 파괴하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원흉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또한 ‘악랄한 귀순 공작의 실제’라는 글을 올려 “표류된 우리 주민 전원이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괴뢰들 스스로가 이미 제입으로 공언한 사실”이라며 “우리 주민 4명을 강제로 억류해놓고는 나머지 인원만 보내겠으니 받아가라는 식의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순결하고 고상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
  - 북한의 대외방송인 평양방송도 “공화국은 이번 사건을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중대도발로 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 불순한 범죄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
  - 하지만 북한 대내매체인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현재까지 주민 31명이 남한으로 표류했다는 사실조차 전하지 않고 있음.

#### ○ 北, “대면확인 불가는 귀순날조 말해줄뿐”(3/8, 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오후 9시께 판문점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를 통해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한 직접 대면 확인을 (남측이) 못하겠다는 것은 귀순 의사 표시가 완전 날조이며 유인 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고 주장
- 이는 한적이 오후 3시30분께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려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단계로 우리측 지역에서 별도로 귀순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
- 통일부는 북측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우리 측 지역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접촉)를 할 수 있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

#### ○ “귀순 4명 송환하라” 北가족 영상 공개(3/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하는 가족의 영상을 9일 게시함.
- 박모(여,22)씨의 어머니 김옥진씨로 소개된 여성은 영상에서 “역적패당이 딸자식을 돌려보내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심정을 모질게 짓밟고 있다”며 “우리 딸에게 더이상 귀순이라는 치욕을 강요하지 말고 억류시킬 때



차림새 그대로 어머니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홍모(44)씨의 아내라는 김현숙씨도 “남편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을 배반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

○ **北, 귀순주민 가족 인터뷰영상 공개(3/11, 우리민족끼리)**

- 남한으로 표류했던 북한 주민 중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 영상을 공개했던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밤늦게 ‘남조선 당국의 비열한 귀순공작 놀음을 단죄규탄하는 가족들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귀순자 박모(여.22)씨의 어머니와 홍모(44)씨의 아내 및 딸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 9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가족이 준비된 글을 읽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나운서로 보이는 남녀가 차례로 가족들에게 “할말이 많으시겠다”며 답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담음.

○ **정부 “관계 만들면 귀순자에 편지 전달”(3/11, 연합뉴스)**

- 정부는 11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남북 가족 간 편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북측이 이런 원칙에 동의하면 귀순자 4명의 북측 가족이 보낸 편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북측 역시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동의가 없으면 귀순자 4명에 대한 북측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부는 북측 가족들이 귀순자들에게 보내온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
- 통일부 당국자는 “2009년 북한에 의해 억류됐던 유성진씨 사건 때도 북측은 서신전달을 요구하는 남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

■ **기타 (대남)**

-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창설 기념사’ 관련 “체제통일 망상실현 기도, 對北정책 不變시사”라고 비난(3.7, 중통·노동신문·평방)
- 南 고위층 부정부패사건(함바비리·영포회·뇌물수수 사건 등) 관련 “오만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 말기암환자 수준, 종말이 뻔하다”고 嘲笑(3.8, 중통·노동신문)
- 韓美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북침핵선제 공격작전이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완성 되고 있다”며 훈련성격 등 거론, 持續 비난과 “초강경대응” 위협(3.9, 중통·노동신문)
- 外通部長官의 ‘방위안보협력 추진’ 訪日 협의를 비난하며 그간 우리 정부의 北핵문제 등 ‘사안별 對日정책협력’을 “親日매국행위”라고 시비 및 “反정부투쟁” 선동(3.10, 중통·노동신문)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음. 이는 최근 국내에서 중국 정부의 김정은 초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청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회피성 답변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맞아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김정은을 포함한 ‘새 지도부’의 편리한 시기 방중을 희망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서한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공식 초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음.
- 장 대변인은 7일 오후 1시25분께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부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미다레’호와 중국 국가해양국 헬리콥터 1대가 근접 대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 헬기의 비행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장 대변인은 최근 신학용 의원이 중국이 한국군의 무인정찰기 도입 계획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해킹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에 불리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음.

#### ● 한·일 6자수석 회동..北UEP 대응 협의(3/8)

-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의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함. 위 본부장과 스기야마 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UEP 대응을 포함해 전반적인 북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특히 양국은 북한 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전제로 남북대화를 거쳐 6자회담 재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위 본부장은 오는 12일 방한하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도 회동하고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 中양제츠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3/7)

- 중국이 2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7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일정의 하나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유리한 시기를 잘 이용해 관련국들이 조속히 6자회담



- 이 재개될 수 있게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음.
- 양 부장은 “6자 회담이 중단된 사이 동북아 안보 정세에 복잡한 변화가 생겼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유관국 사이의 교류를 촉진해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음.
  - 양 부장은 현재 6자회담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회담 재개에 동의하고 있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하느냐와 관련해 대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룻밤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국들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음. 양 부장은 이 같은 상황을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냇물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룰 수 없다”는 성어에 빗대어 설명했다.
  - 아울러 양 부장은 ‘재스민 시위’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에서는 사회 불안 현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은 “중국인들이 설과 원소절(대보름)을 즐겁게 맞았고 현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불안 현상도 보지 못했다”며 “실제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처럼 지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그는 최근 ‘재스민 시위’를 취재하려던 외신 기자들이 연행되고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외국 기자들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중국 경찰이 기자를 때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중·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윈-윈 관계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한 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양 부장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부 의견 차이와 마찰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미국의 추가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결연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음.
  -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질문에 양 부장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는 고도로 민감해 반드시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며 “우리는 작년에 발생한 (어선 충돌)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일본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 나. 미·북 관계

##### ● 프리처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필요”(3/13)

-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2일(현지시각) ‘전략적 인내’ 정책 대신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



- 기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음.
-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특사를 지낸 그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
  - 그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남북관계를 북한이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거리를 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은 초기에 유용했지만 이런 접근법이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나 비확산에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할 시기로, 만일 미국의 정책이 현재의 코스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안보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은 많다”면서 “이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그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확실한 이행이 동반돼야 하며, 중국이 충분히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는 “이런 기본이 돼 있다면, 미국은 상호 우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주의 ▲안보 ▲신뢰구축 ▲경제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소개했음.
  - 우선 인도주의적 분야에서는 결핵치료와 같은 의료지원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별도의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 또 안보분야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대신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주는 것을 논의한 10여년전 북·미 미사일회담과 같은 미사일 관련 대화 및 북한의 우리농축축 프로그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핵연료주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아울러 그는 신뢰구축 분야에서는 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논의할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예비회담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대화나 조인트벤처 설립 문제 등을 다룰 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그는 “우리가 북한과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는 총 10개가 넘는다”면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커뮤니티로 더 깊게 통합시키려는 이런 노력은 남북한 및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캠벨 “대북 식량지원 韓과 긴밀히 협의”(3/12)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2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재신 차관보와 잇따라 면담한 뒤 가진 약식기자 회견(도어스텝)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美, ‘식량상황 확인 실사단’ 北파견 가능성(3/11)

-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사정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실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졌음.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나 계획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북한에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방문해 식량상황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15일까지 계속되는 국제기구 실사단의 평가작업이 끝나고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이뤄진 뒤 필요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뉴욕채널 등을 통한 대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정부 실사단이 식량상황 확인을 위해 북한에 파견될 경우 이는 지난 2009년 12월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한 이후 첫 정부 관계자들의 방북이 됨.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대북식량 지원 시기나 양에 따라 북한에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만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나 반대급부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대북식량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의와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 美정보당국 “北, 대포동2호 시험발사할 것”(3/11)

- 로널드 버저스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10일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저스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전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들의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그는 “추가적인 대포동 2호 시험으로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확산과 관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계속 시장에 내놓고, 이란, 시리아를 포함하는 국가들에 미사일 기술들을





### ● “美 AP 통신, 평양 지국 개설 추진”(3/10)

- 북한을 방문 중인 토머스 켈리 미국 AP 통신사 사장이 북한 당국에 AP 통신 평양 지국 개설을 요청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9일 평양발로 보도했음.
-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북한 소식통을 인용, 켈리 사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지국 개설이 미국인들에게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된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국 개설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그러나 AP 통신의 요청에 대해 북한 당국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음. 이 소식통은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사 대표단도 같은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방북한 켈리 사장은 11일까지 북한에 체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재 평양에는 이타르타스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상설 지국을 두고 있으며 중국 인민일보 기자 1명이 상주하고 있음. AP통신의 영상부문 계열사인 APTN이 2006년 서방 언론으로 처음으로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영상만을 송출하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AP 통신이 평양 지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최초의 서방 언론이 됨.
-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APTN은 평양 사무소에 본사에서 파견한 상주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음. APTN 홍콩 지사의 라파엘 워버(영국) 시니어 프로듀서가 수시로 평양을 방문해 최소 수 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씩 체류하며 현지 취재를 해왔으며 평소에는 현지 직원들이 워버 기자와 연락해 영상화면을 송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다. 중·북 관계

#### ● 中 투먼 “올해 北라진·청진 항로 개통”(3/7)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가 올해 청진항과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를 개통하기로 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김기덕 투먼시 서기를 인용, 7일 보도했음.
- 김 서기는 올해 투먼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을 31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 3, 4호 부두를 이용, 남방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해상 항로를 연내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음. 그는 투먼-라진항을 잇는 해상 항로도 올해부터 운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투먼시는 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북한공업단지를 조기 완공하고 북-중 변경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도 올해 정착시킬 계획임.



## 라. 일·북 관계

### ● 日 신임 외상 “日北 양자 대화 거부할 일 아니다”(3/9)

- 일본의 신임 외교 사령탑이 전임 장관이 내세운 미일동맹과 경제외교 중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생각과 함께 북·일 양자 간 대화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신임 외무상은 9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외교 방침에 대해 “일·미(미·일) 동맹의 심화, 경제 외교를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미·일 양국 간 현안인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키나와(주민들)에 성의를 다해 설명한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한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대응한다면, 마찬가지로 (성의있게) 대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고, 마에하라 전 외상이 밝힌 북·일 간 양자 대화 의사에 대해서도 “거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한국과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견해는 일관된 것”이라고 외무성의 공식 견해를 되풀이했다.

## 마. 기타

### ● “韓·美, 마에하라 日전외상 대북언급에 우려표명”(3/8)

-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이 올해 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었다고 교도통신이 8일 한·일 및 미·일 관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 소식통들은 한·미 양국이 지난 1월과 2월, 일본 정부에 마에하라 전 외무상의 그 같은 언급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을 감안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에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긴밀한 삼각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내일부터 고위급 수산협력회의(3/13)

- 한국과 미국은 14일부터 16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1차 고위급 수산협력회의를 열고 양국 간 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 미국 측



에선 러셀 스미스 해양대기청(NOAA) 수산보좌관(차관보)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부터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고위당국자 간 수산분야 정책협력에 관해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과학·기술협력, 국제 수산기구 현안, 상호 입어 문제 등을 논의할 ‘한미 수산위원회’ 설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명태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국제 수산기구를 주도하는 국가로 이번 회의가 안정적인 양적·질적 양어업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클린턴 “한·미 FTA는 아태지역 모델”(3/1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미 의회의 비준 필요성을 제기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 개월 내에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미국의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FTA의 의회 승인,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 진전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한·미 FTA가 미국에 110억달러의 수출 증대 및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한국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미 FTA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한 뒤 “하지만 핵심 동맹국과의 좀 더 가까운 정치적·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혜택도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의 목표는 미해결 이슈들이 해결돼서 한·미 FTA 및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3개 FTA 모두를 연내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밖에 그는 연설에서 “정부의 조작”이 아닌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반이 아태지역에서 마련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아태지역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이라면서 “더욱이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은 도전에 맞서며 기회를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적극적 개입 방침을 재확인했음.

### ● 美농무 “한·미 FTA 조속히 비준돼야”(3/8)

- 톰 빌색 미국 농무장관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농산물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음. 빌색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



화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농산물 수출이 18억 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빌색 장관은 특히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몬테나)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 보커스 위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음.
-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산 쇠고기에 소비자들이 노출되면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맛에 사로잡히도록 하자”고 역설했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 40%는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됨.
- 빌색 장관은 “한·미 FTA의 비준은 중국, 일본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철폐하도록 하는 협상에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 美 국무, 국방차관보, 12일 한국 동시 방문(3/8)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7일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차관보가 일본과 몽골, 한국을 이번 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번 방문에는 월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함께 함.
-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 우리농 농축프로그램(UEP) 대응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태세 점검 등 양국간 현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이 요청한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에 대한 물밑 조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무부는 캠벨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차관보는 동맹국과의 계속되는 협의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캠벨 차관보는 13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나, 그렉슨 차관보는 다음 주 초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우리 국방 당국자들과 별도의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국무, 국방 차관보가 동시에 한국을 찾음에 따라 사실상 한·미 간에 ‘2+2(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가 열리는 셈이지만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정식으로 ‘2+2 회의’를 한국 정부와 갖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그렉슨 차관보의 경우 일본에서 열리는 ‘2+2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도 함께 방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이에 앞서 캠벨 차관보와 그렉슨 차관보는 9~10일 일본을 방문해



‘2+2(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를 갖고 미·일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어 10~12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지역안보, 평화유지 노력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함.

### ● “美전문가들, 한국 ‘대북정책’ 평가 엇갈려”(3/8)

-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 진보성향의 한반도 전문가 스티븐 코스텔로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민간기관 ‘프로글로벌’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한 결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48%(그렇다 10%, 대체로 그렇다 38%)였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전문가들은 52%(별로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28%)였음.
-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실시했던 똑같은 조사 때(58%)보다 10%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 기관은 지적했다.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54%의 응답자가 효과적으로 미·북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2%의 응답자만이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 긍정적 평가가 훨씬 높았음. 또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80%의 응답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했음.
-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으며, 미국의 정책연구소, 정부, 언론, 학계 관계자 22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 이 중 4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음.

## 나. 한·중 관계

### ● 中공안 “상하이스캔들은 개인 치정 사건”(3/11)

-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 스파이사건 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하이스캔들을 개인 사이의 치정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안은 지난 8일 이후 상하이스캔들이 한국에서 톱스뉴스로 연일 보도되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개인들의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분류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11일 나타나고 있음.
- 이들 공안의 입장은 공식 발표가 아닌 사건이지만 언론을 상대로 표명됐다는 점에서 사건의 흐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 상하이스캔들은 계속 확대되면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어서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모습임.
- 덩모(33)씨라는 젊은 여성이 정부 유력인사를 등에 업고 각종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



고 덩씨를 비호해온 인사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중국 공안 A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덩씨 사건은 남녀간의 사생활인데 한국 언론의 반응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서는 덩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덩씨 불륜 외의 브로커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안하무인격의 행동과 배후의 유력인사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언급을 회피했음.
- 공안 B씨는 “덩씨 사건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한국 언론의 추리력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 공안 C씨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덩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물으며 향후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중국 공안은 이미 덩씨 사건의 전말을 한국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덩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H 전 영사가 지난 1월24일 덩씨의 남편 J씨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덩씨는 이미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덩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면 배후의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는 물론 덩씨의 그간 불법적인 행동들도 파악됐다고 추정되는 것임.

### ● 신임 상하이 총영사 “덩씨 조사요청 계획없다”(3/11)

- 중국 상하이(上海) 총영사관의 안총기 총영사는 11일 ‘상하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중국여성 덩모(33)씨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하이에 부임한 안 총영사는 영사관 공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번 주말에 상하이에 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합동조사단은 서울에서 그동안 해온 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상하이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조사 후 서울로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따로 요청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덩씨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 그의 이런 언급은 현재로선 중국 당국에 덩씨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됨.
- 앞서 상하이 총영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조사단이 덩씨의 중국 조사를 희망하면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덩씨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 내에 기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됨.
- 상하이 현지에서는 덩씨의 조사를 중국 측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관례와 자국민의 인권이 달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



국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점을 의식해 정부가 방향전환을 한 것으로 관측됨.

-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덩씨와 상하이 총영사관의 일부 외교관들 간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자 내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덩씨는 지난 8일 한국 언론매체에 이번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자취를 감춰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안 총영사는 총영사 관저에 공관원이 무단으로 진입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저는 공관장의 사저이자 공관의 업무영역인 주거와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곳으로 공관원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음.

### ● 中 환구시보 “韓 간첩사건 공개하자”(3/11)

-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과 관련해 중국 여성 덩 모(33)씨가 간첩일 가능성이 낮다고 연일 보도해온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1일 한국의 간첩사건을 공개해 맞불을 놓자는 공세적 주장을 폈음. 공산당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하는 환구시보가 이런 주장을 펼 것은 한국에서 덩 씨 간첩설이 대두되는데 대한 중국 당국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임.
- 환구시보 중국어판과 영문판은 ‘이제 외국 간첩 사건을 공개할 때다’라는 사설을 동시에 싣고 당국이 ‘중국 간첩설’에 침묵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간첩사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 환구시보는 한국의 주요 매체들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중국 간첩사건’으로 조명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은 자주 의혹과 실체없는 단서를 뒤섞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음. 환구시보는 중국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외국 간첩 사건을 적발해도 대외 관계를 고려해 이를 비밀에 부쳐왔지만 이제 중국은 방식을 바꿔 외국 간첩 사건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특히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 간첩설’을 꺼낼 때마다 중국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국과 일본의 간첩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환구시보는 ‘중국 간첩설’을 들먹이는 국가들이 그렇듯 중국도 이들 나라와의 외교 관계 훼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강성 발언도 했음. 이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상하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꾸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한국 언론과 관리들이 덩 씨의 정체체를 추측하는데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비꼬았음.
- 환구시보는 전날도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은 중국과 관련이 없다며 한국이 냉정을 되찾고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에 대한 경고 수위를 연일



높여왔음.

- 한편 환구시보를 제외한 중국의 다른 관영지와 상업지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 보도를 계속 삼가고 있으며 일부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들만 환구시보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음.

#### ● 정부, 中에 상하이스캔들 조사 요청도 검토(3/10)

- 한국 정부가 상하이스캔들의 핵심인물인 덩모(33)씨에 대한 조사를 중국 당국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박진웅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는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제하면서 “조사단이 덩씨의 중국 조사를 희망하면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덩씨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우리가 공문을 통해 덩씨의 조사를 중국 측에 요청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관례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응할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덩씨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일개 영사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외교부나 청와대 등 정부 고위층에서나 결정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음.
- 상하이 총영사관의 외교담당 영사는 “총영사관에서 덩씨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자국민만 소중히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조사가치가 있어도 외교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조사단을 넘어 국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부총영사는 이와 함께 치안담당 영사를 통해 중국 공안 측에 덩씨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덩씨는 지난 8일 문제의 상하이 사건이 한국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주변인물들과 연락이 끊긴 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일각에서는 중국 공안이 지난 1월 하순부터 덩씨를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신병을 확보하고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상하이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통상부 직원 등 총 9명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13일 중국 상하이 현지 조사에 착수키로 했음.

#### ● <상하이 스캔들, 韓中 갈등비화 우려>(3/9)

- 중국 여성과 한국 외교관들과의 추문사건이 기밀유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언론매체들이 ‘거북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칫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한국 매체들을 통해 8일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이 보도됐을 때 만해도 잠잠했던 중국 매체들이 하루 늦은 9일 일제히 반응하고 나선데서도 침묵에서 대응



- 으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가 감지됨.
- 아직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애초 비자발급을 둘러싼 상하이(上海) 한국 총영사관의 간부급 직원들과 중국 여성 간의 애정행각 정도로 비쳐졌던 이번 사건이 정부 기밀을 빼내려 한 의도적인 접근이었고 이를 통해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매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 특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이날 자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사건의 중심인물인 “중국인 덩(33)모씨가 간첩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 매체들이 방첩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음.
  - 환구시보는 아울러 한국 매체들의 그런 보도태도의 근저에는 ‘중국 위협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논리를 폈음. ‘북한 간첩’에 대해 유독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언론 매체들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중국 여간첩’이라는 소재를 꺼내 중국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
  - 중국청년보도 한국 매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환구시보와 마찬가지로 방첩 사건으로 모는 경향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적었음.
  -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해 중국의 주요 매체들도 환구시보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했고 중국 최대 검색포털인 바이두(百度, Baidu)에 이번 상하이 스캔들이 뉴스의 메인 코너에 오르는 등 큰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단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반응을 지켜보고서 그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음. 이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 계획을 밝힌 만큼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반응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임.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히 비자발급의 편의를 미끼로 오간 성 추문에 불과하다면 중심인물인 중국인 덩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임.
  - 그러나 조사 결과 영사관의 해당 간부급 직원들이 덩씨와의 소통과정에서 영사관 내부 통신망에 있는 국가기밀급 정보까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중 간 공조수사가 불가피할뿐더러 만약 덩씨를 통해 그런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흐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중 외교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월초 관련 제보가 접수돼 1차 조사가 벌어져 관련자들이 일부 소환됐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등 ‘장기간’에 걸친 검토 과정에서 ‘방첩’ 혐의점은 나오



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새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바탕이 성추문인데다 국가기밀 유출의혹이라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한·중 양국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 “고고도무인정찰기 軍기밀, 中에 해킹당해”(3/7)

- 우리 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도입과 관련한 군사기밀이 지난해 6월 중국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당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중국은 지난해 6월 우리 군의 기밀인 ‘UAV(무인정찰기)도입 계획’을 해킹했다”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년 9월29일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HUAV도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실는 등 HUAV를 판매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2006년에는 중국의 해킹을 적발했을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즉각 중국에 강력 항의한 바 있지만, 현 정권 들어서는 중국의 해킹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항의조차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부연했음.
- 그는 또 HUAV 도입 지연에 대해 청와대와 합참간 의견 충돌도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음. 미국의 대표적인 HUAV인 글로벌 호크는 18km 이상의 고도에서 200km 이상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고 작전반경도 3천km 이상이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도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 의원은 “‘눈’에 해당하는 HUAV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글로벌 호크의 한국 및 일본 판매 카드를 활용하는 만큼, 자칫 현 정부가 이용당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음.

### 다. 한·일 관계

#### ● <日 강진> 한-일 외교일정 차질 우려(3/13)

-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일본 강진사태의 여파로 한·일 양국간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 국가적 비상체제 속에서 피해상황 수습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대외관계 일정에 신경 쓸만한 여력이 없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관측임.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의연한’ 대응기조로 대내외적으로 안심시



키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사안별로 외교일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우선 19일부터 이틀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임.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이번 회의를 동북아 역내 삼각협력 대화체로 ‘정례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올해 회의는 2007년 6월 제주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5번째임.
- 외교가에서는 회의 자체가 당장의 주요현안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닌데다 주최국인 일본이 사상 최악의 재난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개최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은 편임.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임. 이번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성숙한 대응태세를 견지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외교일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임.
-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입장을 전달받는데 없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고 “전적으로 일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일 대테러협의회도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이 1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보는 가능자가 될 것으로 보임.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불안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의연한 대응 기조를 설명하고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임.
- 정부 대 정부 차원이 아닌 정치권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당장 일본내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민주당 대표대행은 당초 15일부터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자진 취소했음. 외교부 관계자는 “센고쿠 의원측이 어제(12일) 지진 사태로 인해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외교부측에 전달해왔다”고 말했음. 센고쿠 대행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외교, 통일장관을 면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음.

### ○ 외교부, 日에 긴급구조대 파견키로(3/11)

- 외교통상부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 119 구조단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와 협의해 지진피해 복구와 구조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외교부는 이를 위해 중앙119 구조단 40명을 비상 대기시켰다고 밝혔음. 외교부는 또 대통령과 외교장관 명의로 위로전을 발송할 예정임.

### ● 日 신임 외상 “교과서 검정은 일본 제도”(3/11)

- 일본의 신임 외무상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원론적인 태도를 강조했고, 자신의 외가족 조상과 안중근 의사의 관계를 의식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음.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10일 일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교과서 검정에 대해 “일본의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라며 “일본의 규칙에 따라 확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교육기본법 개정(2006년)과 신학습지도요령 발표(2008년) 후 처음으로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원론 수준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 마쓰모토 외상은 이와 함께 “일·한(한·일) 관계는 중요하다”며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취임직후) 전화회담을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신의 외교조부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초대 조선통감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도자로서 몇몇 큰 나라의 진로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강한 관심을 갖고 발자취를 좇고 있다”고 말했고, 이토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된 데 대해서는 “(외교조부가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 日 언론 ‘총리 측근 의원 독도 서명’ 비난 공세(3/10)

- 일본의 한 여당 의원이 지난달 말 한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산케이신문 인터넷판과 같은 계열의 방송사인 후지 TV 등은 9일 낮부터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72)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竹島) 영유권 주장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음. 도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일 기독교원연맹의 일본 측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열흘 만에 거론한 것임.
-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산케이신문은 도이 의원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로 이뤄진 ‘국가 형태 연구회’의 대표를 맡는 등 총리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 교수의 입을 빌려 “지나치게 경솔하다”고 비판했음.



- 산케이신문 인터넷판과 후지 TV에 이어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도이 의원은 일본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기독의원연맹의) 공동 선언은 외교 교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간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적절한 형태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일본 매체가 이처럼 ‘도이 때리기’에 나선 데에는 민주당 정권 주요 각료들이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며 자민당 정권과 다른 견해를 거듭 밝힌 것을 문제 삼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의 사임 등으로 흔들리는 간 내각을 궁지로 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 <“찰떡궁합이었는데..” 日외상 퇴진에 당혹>(3/7)

- 정부는 7일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정치현금 수수논란 끝에 전격 사퇴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임. 일본 정치권의 손꼽히는 지한파로서 김성환 외교장관과는 ‘찰떡궁합’을 보여온 마에하라 외상의 돌연한 낙마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서는 분위기임.
- 특히 오는 19~20일 일본이 주최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다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일본 측 공조파트너가 사퇴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공조와 협력모드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표정이 읽히고 있음.
- 정부의 한 당국자는 “마에하라 외상은 워낙 한국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가 높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솔직히 당혹스러움이 크다”며 “다만 양국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마에하라(49) 외상은 민주당 내에서 ‘전략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모임’의 수장을 맡아온 인물로, 외교장관 임명 이후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관계 속에서도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게 우리 당국자들의 평가임. 특히 마에하라 외상과 김 장관은 올 1월15일과 2월16일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번갈아 개최하면서 남다른 호흡을 맞춰왔음.
- 마에하라 외상은 국내정치적 동기에 의해 북·일 대화를 추진해보려는 강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에 전적인 동의 의사를 표하면서 ‘찰떡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했음.
- 도쿄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는 관저로 김 장관 부부를 초청, 만찬을 베풀며 융숭하게 환대한 일화도 유명함. 일본 정부가 한국 외교장관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한 것은 1997년 4월 유종하 외교장관 방일 이후 14년만임.



- 정부 당국자들은 마에하라 외상의 전격 사퇴에도 불구하고 주요 외교 일정과 양국 협력의 견조한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오는 19~20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현안”이라며 “그러나 일본이 주최국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라. 미·중 관계

##### ● <로크 지명자, 中 지도자들과 탄탄한 인맥>(3/11)

- 중국계 인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발탁된 주중 미대사에 발탁된 게리 로크 지명자가 출신 배경과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과 탄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로크 주중 대사 지명자는 지난 2002년부터 후 주석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음.
- SCMP에 따르면 로크 지명자는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로 재직 중이던 200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후 주석을 처음 만났음. 이어 로크 지명자는 2004년 워싱턴주의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후 주석과 재회했음. 후 주석은 당시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이었지만 로크를 1시간 이상 만났다고 SCMP는 전했다.
- 후 주석은 2006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방문했을 때도 로크의 출생지인 시애틀을 방문하기도 했음. 당초 후 주석은 로크 지명자가 워싱턴주 주지사로 재직하던 2004년 시애틀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하는 바람에 미국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SCMP는 전했다.
- 로크 지명자의 아버지는 광둥(廣東)성 타이산(台山) 출신이며, 어머니는 홍콩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했음. 아울러 로크 지명자는 워싱턴 주지사와 미국 상무장관 재직 시절 후 주석 이외의 다른 중국의 정치지도자들과도 친분을 쌓아왔음. 그는 상무장관 시절 미국의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홍콩 등 중국의 주요 지역을 방문한 바 있음.
- 로크 지명자가 중국의 지도자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데는 중국계 첫 주지사, 중국계 첫 상무장관이라는 자신의 출신 배경 이외에도 아내인 모나 리로의 배경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쑨원(孫文)의 장남인 쑨커(孫科)의 의붓아들임.

##### ● 中외교부, 신임 주중 美대사 지명자 환영(3/10)

- 중국 정부가 게리 로크 신임 주중 미국대사 지명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음.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



서 “중·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중국은 새 주중 미대사가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피력했음.

- 장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새 주중 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임.

#### ● <申언론, 새 美대사 내정자에 큰 관심>(3/9)

- 중국 언론매체들이 차기 주중 미국대사로 내정된 게리 로크(61) 상무장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들 매체는 8일 미국의 유력 언론 보도를 인용해 로크 장관이 4월말 물러나는 존 헨츠먼 주중 대사의 후임자로 내정됐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헨츠먼 대사가 오는 2012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며 로크 장관이 후임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원 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이 매체는 로크 장관이 중국인 3세로 조부모와 부모 모두 중국인이고 워싱턴 주지사를 재직 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작년에는 장관으로서 수십명의 기업인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화교 출신의 주중 미국 대사가 1개월여 후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로크 장관의 가족 이민사와 이력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중국신문사는 특히 “로크 장관이 1997년 워싱턴 주지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공개했음.
- 아울러 “이미 중·미 관계는 단순히 양국 차원을 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양국 간 소통과 상호작용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안전 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신임 주중 미국 대사 임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 언론 보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로크 장관의 대사 내정 소식을 보도했음. 신화통신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았음. 주요 포털사이트들도 로크 장관의 주중 대사 지명에 관심을 표시했음.
- 중국 내에서는 중국계 첫 주지사에 이어 첫 상무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첫 주중 미 대사라는 이민 신화를 써가는 로크 장관에 대해 ‘동질감’을 표시하면서 반기는 기색이 역력함. 특히 대만에의 무기판매, 남중국해 갈등, 한반도 문제,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과 무역분쟁 등으로 미국과 갈등이 드러났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1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가 이뤄진 가운데 중국계 첫 주중대사가 내정된데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임.
- 그러나 로크 상무장관이 양국 간 갈등을 최전선에서 ‘조율’하는 역할



을 해야 하는 주중 대사로 내정된 게 중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로크 장관의 주중 대사 지명 소식에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임.

### ● 中, 美·EU에 올해 두번씩 구매단 파견(3/7)

- 중국이 올해에 미국과 유럽에 각각 두차례씩 대규모 구매 사절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7일 완지페이(萬季飛) 중국 국제무역촉진회(CCPIT) 회장을 인용해 보도했음.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완 회장은 6일 정협 회의 와중에 “중국이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무역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인 제품구매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유럽 간의 무역균형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 보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각각 미국, 그리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포함된 유럽연합(EU)에 중국 무역 대표단을 보내고 하반기에도 각각 한차례씩 더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음. 그는 “중국에게 무역균형 유지는 이미 시급한 문제로 대두했다”며 “더 많은 구매사절단을 외국에 보내고 중국 내에서 수입촉진을 위한 포럼과 박람회 개최를 가능하면 많이 열겠다”고 밝혔음.
- 완 회장은 아울러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에 중국-일본 그린(Green) 경제포럼이 중국에서 개최되며 이 포럼 기간에도 중국은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제품 등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량 구매를 할 것이라고 공개했음.
-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작년 12월에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2011년은 수입을 촉진하고 무역 균형을 맞추는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EU에 각각 1천813억달러, 1천428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 마. 미·일 관계

#### ● 오바마 “일본 국민 도울 준비 돼 있다”(3/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일본의 강진 피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엄청난 시련의 시기에 놓여 있는 일본 국민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 양국 간의 우정과 동맹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며, 일본 국민들이 이런 비극을 극복할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나와 미셸은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을 포함해 모든 일본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과 태평양 주변의 쓰나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할 것이며, (쓰나미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당국의 지시사항을 청취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 ● “美, 오키나와 폼하 일본부장 경질 방침”(3/10)

-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폼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무부 일본부장을 경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무부의 케빈 메어 일본부장이 ‘오키나와는 속임수의 명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메어 부장을 경질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음.
- 미국은 메어 부장의 발언이 오키나와 주민의 감정을 악화시켜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의 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일 밤 일본에 도착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미국을 대표해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밝혔음. 메어 부장의 상관인 캠벨 차관보는 10일 오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재차 사과하기로 했음.

### ● 美 국무차관보, 오키나와 폼하 사과 예정(3/9)

- 미국 국무부의 케빈 메어(Kevin K. Maher) 일본부장의 오키나와(沖繩) 폼하 발언과 관련 일본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개인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8일(미국 시간) 기자회견에서 메어 일본부장이 ‘오키나와는 속임수의 명수이고 나태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하는 캠벨 차관보가 개인적으로 사죄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무부는 메어 일본부장의 발언을 전한 언론보도가 정확치 않은데다 국무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국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 정부나 국무성의 입장이 아니라 캠벨 차관보가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한다는 방침임.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오키나와의 주민 여러분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며 오키나와 주민들과 단단한 우의 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캠벨 차관보가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면 일정부분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정부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음.



### ● 美 오키나와 폼하 외교 마찰 비화(3/8)

- 미국 국무부의 케빈 메어(Kevin K. Maher) 일본부장의 오키나와(沖繩) 폼하 발언이 양국 간의 외교 마찰로 비화했음. 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의회는 케빈 일본부장이 작년 12월 대학생 상대 강연에서 “오키나와는 속임수의 명수이고 나태하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항의하고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오키나와현 의회는 “현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발언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음.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시 의회도 “과중한 기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발언으로 차별적이며 오키나와를 식민지 취급하는 발상이다”면서 벅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언 당사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음.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키나와 현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음. 그는 미국 측에 케빈 일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음.
-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키나와 현민을 우롱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 일본의 국민과 정부 감정이 악화되자 주일 미국 대사관은 “(케빈 일본부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견해가 아니다”고 해명했음.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미군 기지와 관련 오키나와 주민들이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음.
- 케빈 일본부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는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됨. 오키나와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 <“오키나와는 나태”..미 국무부 간부 발언 논란>(3/7)

- “일본인은 합의문서를 갈취 수단으로 사용한다” “오키나와는 속임수의 명수이고 나태하다” 케빈 메어(Kevin K. Maher) 미 국무부 일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이 일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메어 부장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부에서 미국 아메리칸대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일본식 와(和)의 문화는 늘 합의를 추구한다”고 설명한 뒤 “일본인은 합의문서를 갈취 수단으로 사용한다. 합의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한다”고 말했음.
- 이어 오키나와(沖繩) 지역을 “(일본 정부에 대한) 속임수와 갈취의 명수”라고 비하한 뒤 “나태하고 고야(박과의 한해살이 풀인 ‘여주’를 가리키는 오키나와 사투리)도 재배할 수 없다”고 발언했음.



- 메어 부장은 또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 해병대 비행장에 대해 “(주택지와 가까운) 후쿠오카(福岡)공항이나 이타미(伊丹)공항(오사카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라며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고, 일본 정부는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 지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우선 (기지 이전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라”고 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음. 메어 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강생 여러명의 메모를 기초로 만든 A4 용지 3쪽 분량의 ‘발언록’에서 드러났음.
- 메어 부장은 발언의 진의를 묻는 교도통신 기자에게 강의는 “오프더레코드(비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발언록은 “정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고 말했음.
- 메어 부장은 2006~2009년 주 오키나와 총영사로 있었고, 최근에는 후텐마 비행장을 현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과 달리 현내 이진을 강하게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 이같은 발언에 대해 나카이마 지사는 “(오키나와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이상할 정도다”라며 “(메어 부장은) 오키나와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거냐”라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바. 미·러 관계

### ● <美 부통령 방러, 양국 관계 재설정 강화>(3/10)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미·러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관계 ‘재설정(reset)’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음.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미국 AP 통신 등 양국 언론은 10일 바이든 부통령이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양국 간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음.
- 바이든 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및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회담도 협력 방안 논의 중심의 건설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음.
- 푸틴 총리는 10일(모스크바 시간)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비자를 면제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했음. 푸틴은 “현재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무비자 체제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만일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앞서 미국과 먼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면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서 역사적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푸틴 총리의 제안에 바이든 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음. 그러자 푸틴은 “의회에 영향력을 가진 미국 행정부의 중요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인 당신이 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비자 면제를 통해) 양국은 과



- 거의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넘기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푸틴 총리의 제안과 관련,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미하일 마르젤로프 위원장도 “미-러 양국간 비자 면제가 냉전에 효과적 중 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음. 마르젤로프는 비자 면제와 함께 미국이 1970년대에 채택한 러시아와의 무역 제한 법안인 ‘잭슨-베닉 수정안’을 폐지하는 것도 냉전 종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74년 미국의 헨리 잭슨과 찰스 베닉 의원이 발의해 채택된 ‘잭슨-베닉 수정안’은 자국민에게 이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고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제한을 둘 것을 규정한 법안임. 소련이 자국 내 유대인들의 이주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발의됐음.
  - 미국은 1989년부터 매년 수정안 효력 동결 조치를 취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안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고 있음. 러시아는 이 법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워싱턴 시간) 자국 상원에서 연설하며 “미 정부는 올해 안에 잭슨-베닉 수정안을 폐지하고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바이든 부통령도 같은 날 모스크바 외곽의 관저에서 열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은 우리의 최우선 의제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측에 대한 선물로 앞서 자국 의회가 비준한 대(對) 아프가니스탄 미국 군수물자의 러시아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에 최종 서명했음.
  - 8일부터 러시아를 실무방문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10일 푸틴 총리와의 회담과 모스크바 국립대 연설을 끝으로 러시아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몰도바 수도 키쉬뇨프로 출국할 예정임.

#### 사. 중·일 관계

##### ● <日 강진> 中, 지진 위로..구조대 파견 방침(3/11)

-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이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당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장위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 원 총리와 양 부장은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일본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중국은 일본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일



본에 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 한편 이날 중국중앙(CC)TV가 저녁 메인뉴스 시간에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는 등 중국 언론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초대형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재 비상근무에 돌입해 자국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음.

### ● 中 동중국해 가스전, 생산단계(3/9)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 春曉) 가스전에 대해 중국이 단독 굴착에 나서 이미 생산단계에 진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간부가 “춘샤오 가스전은 우리가 개발해 생산을 시작했다. 이미 석유가 나오고 있다”고 시라카바의 굴착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 시라카바 일대는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로 하고 있는 ‘일중 중간선’ 부근의 해역으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이어서 중국의 단독 굴착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예상됨. 하지만 중국은 춘샤오 가스전이 자국 영토 내에 있어 완전한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생산·굴착을 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임.
- 중국과 일본은 2008년 6월 동중국해 가스전에 대한 일본 법인(기업)의 출자와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분에 합의하고 작년 5월 원자바오 총리 방일 당시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작년 9월 센카쿠(尖閣: 중국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선박 충돌 이후 중국 측이 일본과의 협의를 연기했음.

### ● 中 헬기-日 함정, 동중국해서 한때 대치(3/7)

-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 마찰이 이어지고 있음. 7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께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 부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미다레’호와 중국 국가해양국 헬리콥터 1대가 수평 거리 약 70m, 높이 약 40m까지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음.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당시 사미다레호는 단독으로 경계 감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중국 측 헬기에는 국가해양국 소속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중국(中國) 해감(海監)’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음. 헬기는 사미다레호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서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측은 중국 헬기가 국제관례상 함정 접근 한계(수평 거리 약 450m, 높이 약 150m)를 깨고 일본 함정에 접근했다며 “위험한 행위”라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아. 중·러 관계

### ● 중국개발은행, 헤이룽장 對러경협 지원(3/12)

-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러시아 접경인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대 러시아 경제협력 핵심지역으로 선정,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헤이룽장성 정부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 국가개발은행은 헤이룽장성이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한 헤이샤즈(黑瞎子) 삼각주 자유무역지구, 러시아 접경지역 개방벨트, 러시아와의 경협구역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헤이룽장성을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에너지, 원자재 수입 창구로 육성해 중국의 자원난을 해소하고 러시아와의 경협도 확대할 방침임.
- 국경 분쟁으로 한때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헤이룽장성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 공유에 합의하는 등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의 대 러시아 경협 창구로 부상했음.
- 지난 1월 헤이룽장성의 대 러시아 무역액은 5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음. 헤이룽장성의 무역액은 이 기간 중국의 대 러시아 전체 무역액의 10.2%를 차지하는 액수임.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매달 131만8천t씩 공급하는 시베리아산 원유도 헤이룽장을 거쳐 중국에 공급됨.

## 자. 기타

### ● <日 강진> 외교 지형도 큰변화 예고(3/13)

- 일본 열도를 뒤흔든 사상 최악의 강진사태가 동북아 외교지형도 흔들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번 사태가 역내 모든 어젠다를 집어삼키는 메가톤급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동북아 역내 담론구조와 역내질서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선 동북아의 최대 당면 현안이었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와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당분간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수습과 복구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핵' 이슈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짐. 물론 미·중을 중심으로 큰 틀의 대화재개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이번 사태의 여파로 6자회담과 같은 대형 외교이벤트가 조기 연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임.
- 외교소식통은 13일 "그러잖아도 지난달 초 남북 군사 실무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를 보여온 6자회담 재개 흐름은 유보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한·미를 상대로 강·온 양면전술을 펴온 북한으로서는 3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도발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 외교가가 보다 주목하는 점은 격렬하게 전개돼온 동북아 역내 대립과 갈등구도가 일정 정도 '완화'될 가능성임.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



- 해 대폭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변 국가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분석임.
- 당장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어온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일본에 대해 자극적 대응을 삼갈 가능성이 높음. 앞으로 역내 또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일본 강진 피해지원과 대응문제가 핵심 어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당장 오는 5월 한·중·일 정상회의, 6~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북핵보다도 일본 지진 피해지원과 재난구호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주의제가 될 공산이 큼.
  -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의 수위가 올라가던 한일관계는 ‘조용한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관망됨. 정부는 당초 교과서 개악시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사태 이후 신중한 대응을 꾀할 것이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망이다.
  - 그러나 가장 큰 후폭풍을 몰고 올 변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임.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수면 아래에서 진행돼 온 ‘핵 안전(Nuclear Safety)’ 문제가 다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임.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초 개최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전 문제가 최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핵폐기에 초점을 맞춰온 북핵 논의에도 ‘핵 안보’ 내지 ‘핵 안전’이 새로운 의제로 부가될 것으로 분석됨.
  -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에너지 외교에도 일정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 원전수출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에서도 원전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